



탈진실 사회와 저널리즘의 역할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모습을 보며 이제 한국도 탈진실 사회가 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Post-truth Society’를 번역한 말이 탈진실 사회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탈진실(Post-truth)이란 표현은 1992년 스티브 테지치(Steve Tesich)란 세르비아계 미국작가가 ‘네이션(The Nation)’이란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했다(www.wikipedia.org).

탈진실 사회의 의미

이 표현은 주로 정치행위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상황에서 사용돼 왔다. 이 개념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발화자의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현실세상의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주장하는 내용과 그 말의 진실성, 또는 그 말이 지칭하는 현실에 대한 정확성은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현실은 현실로 존재하지만, 언어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실의 실체에는 관심이 적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인식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 매체의 기자가 걸어온 전화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시작됐다. 전화의 내용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검색어 전쟁에 관해서였다. 저널리즘 연구자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질문의 요지였다. 이 기자가 제시한 검색어들은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근조 한국 언론”, “가짜뉴스아웃”, “한국 언론 사망”, “정치검찰아웃” 등 이었다.

기자의 얘기를 듣고 들여다 본 온라인 세상에서는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서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그야말로 치열한 상징적 전쟁 (Symbolic war) 을 벌이고 있었다.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주요 매체들이 이러한 수사적 전쟁에 끼어들어 같이 전투의 판을 키우고 있는 점이었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쟁판에 지상파 방송과 주요 일간지, 디지털 매체가 예외 없이 상징 전쟁의 하부행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주로 특정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 원희룡 지사,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느 조국 후보자의 친구 등이 개인 SNS에 쓴 내용이나 방송대담에서 했던 말들이 검증 없이 주요 매체를 타고 확산됐다.

저널리즘의 표피화와 부정적 기여

이는 매우 위험하고 실망스런 상황이었다. 기자의 역할은 전개되는 사건(Event)의 뿌리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파고들어, 무엇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드러난 현실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독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민주적 의사결정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다루는 기자들에게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들은 그저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표피적으로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성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 극단적 진영세력들에게 원초적 격정을 촉발하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탈진실 사회로 가는 데, 안타깝게도 저널리즘이 강력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질문한 기자에게 불편할 수 있는 답을 두 가지로 나눠 건넸다. 첫 번째 답은 실시간 검색어 논쟁을 기사로 다루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실시간 검색어 작업을 주도하는 세력의 상황논리를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답은 탐사 보도에 대한 부탁이었다. 기자들이 실검전쟁이 어떻게 기획되고 수행되는지를 추적해 기사로 써달라고 당부했다. 어디서,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동원된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혹시 인공지능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포털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취재해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언론 환경에서 이러한 보도가 실현되기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

탈진실 사회를 만드는 요인들

무엇이 우리사회의 탈진실화를 부추겨왔는가? 지난 30여 년, 현업과 학계를 오가며 정리해온 생각을 따라가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한국 사회의 탈진실화를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 원인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도구적 언론관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신문과 방송을 홍보의 도구로 여겨왔다.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일이다.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등의 경영진을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보수적 성격이건, 진보적 성격이건 다르지 않았다. 지난 30여 년,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관련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독립적 판단의 기능을 키울 수가 없었다. 신문 독자와 방송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쪽 매체들의 친정부 편향성을 감안하고 뉴스를 소비해야 했다. 그 결과는 매체 지형 편향성의 구조화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독립적 매체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운영 관행은 기자의 뉴스에 대한 판단이 구조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중적 인식을 고착시켜왔다.

우리 사회를 탈진실화로 끌고 가는 두 번째 원인은 민주화와 함께 극심해진 언론의 정파화 추세다. 권위적 군사정부 시대가 지나며, 한국 언론계는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 시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대 한겨레·경향신문, 지상파 대 종편 등 매체의 소유구조에 따라 보도 성향이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남북 문제와 노동 문제, 정치개혁과 경제 쟁점 등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지극히 갈등적인 보도 양태를 유지해 왔다. 신문은 사실과 칼럼 등 오피니언 면에서 각자의 색깔을 최대한 강력하게 드러내는 편집전략을 취해왔고, 텔레비전은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을 초청하는 과정에 진보와 보수의 논객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거의 모든 사안이 두 개의 극단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구조를 일상화시켰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이러한 사회적 토론구조가 유지된 결과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된 탈진실 사회가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안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상대화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동의하는 현실에 대한 통일된 인식은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논의 구조가 고정된 느낌이다.

세 번째 원인은 디지털 미디어와 모바일 매체의 급격한 보급이다. 이러한 매체구조의 변화는 언론의 수익 창출구조를 트래픽 중심으로 바꿔버렸다. 포털이나 언론사 가릴 것 없이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이제 방문자를 많이 확보해야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시장구조에서 생존을 건 투쟁을 하는 처지다. 그리고 그 동안의 데이터 분석 결과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자를 끌어 들이는 가장 손쉬운 매개체로 자극적인 뉴스만한 게 없다는 것이 일반화된 인식이다. 이러한 매체 수익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낚시성 뉴스의 폭증 현상을 불러왔다. 다시 말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그 기사가 대중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

요한 고려사항으로 자리잡았다는 말이다. 거기에 앞서 예시한 실시간 검색어 전쟁 같이 디지털 세상에서만 가능한 여론 조작 시도가 추가된다.

디지털 세상의 뉴스 문법은 기사의 완결성, 정보의 진실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기사가 얼마나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지, 아니면 정파적 관심을 부추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뉴스의 흐름을 보면,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고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탈진실 사회는 왜 문제인가

다음은 중앙일보 김진국 대기자가 지난 9월 3일 신문에 쓴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칼럼의 시작 부분이다.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이 의미가 없어졌다. 비난하는 쪽이나 반박하는 쪽이나 서로 ‘진실’(fact)을 외친다. 하지만 더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편을 갈라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목표뿐이다. 말꼬리를 잡고, 약점을 후벼파고, 상대측의 신뢰를 공격한다.”

탈진실 사회의 단면을 이보다 잘 설명하기 어렵다. 김진국 대기자는 이어서 말한다. “조 후보가 임명되고 말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식,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진실이 무시되는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제한의 다툼이 있을 뿐이다. 패트릭 모이니헌 전 미국 상원의원은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각자만의 사실을 가질 자유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어느 집단이든 생각과 별도로 존재하는 현실을 마음대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는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고 말한 영국의 언론인 C. P. 스콧 (Scott)의 생각과도 일맥 상통한다.

저널리즘은, 이러한 생각의 줄기를 따라가면, 모두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진실의 바닥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본령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집단의 집단사고를 마치 현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영원한 갈등의 늪에 갇히게 된다. 특히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이나, 반일감정 등에서 드러나듯이 국제관계를 다루는 기사가 진영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지극히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탈진실 사회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한국 언론과 기자들이 너무 늦지 않게 각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